

카드사, 실적 악화에 수수료·DSR 규제 ‘칩칩산중’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

5개 카드사 순이익 12% 가량 줄어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 ‘울상’
DSR 영향까지... 구조조정 가능성



정부의 잇따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3분기 카드업계의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업계 1위 신한카드 순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당국이 수수료 추가 인하 방침을 세운 데다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범 도입되면서 4분기 실적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카드사가 각종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력 감축 등을 단행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 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총 4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607억원) 가량 감소했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3955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06억원과 비교해보면 49.3% 급감했다. 지난해 실적이 2758억원의 대손충당금 환입이 반영된 영향이다. 3분기 순이

익은 1136억원으로 전년 동기(1495억원) 대비 24.0% 감소했다.

삼성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750억원으로 9.9% 줄었다. 3분기 순이익(807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했다.

하나카드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80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973억원) 대비 17.6%(172억원) 감소했다. 3분기 순이익은 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는 2455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2339억원) 대비 4.9%(116억원) 증가했다. 캠프 채권 매각 이익이 반영돼서다.

캠프 매각 이익 370억원을 제외하면 KB 국민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0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39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우리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8.9% 늘어난 886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일회성 요인 이익 57억원을 제외하고도 올해 순이익은 829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813억원) 대비 2% 늘었다.

정부의 연이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0년간 9차례 인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정부가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는데 더이상 내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논의 결과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가량 절감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카드업계는 울상이다. 당국은 올해 발표된 수수료 인하분 7000억원에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 등을 줄이면 3000억원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등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은행권이 시범 운영하던 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신용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에 시범적으로 적용됐다. DSR은 대출자가 해마다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 이상이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을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카드사 이익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인하에 DSR 도입

까지 각종 규제에 실적 악화가 불가피해진 카드사가 살아남기 위해 인력 구조조정 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 카드사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등 노동자 및 고객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며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지난 1월 2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국민카드도 올해 들어 분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직원수는 1만1649명으로 전년 동기(1만1874명)보다 225명 줄었다. 2015년 6월 말 1만3115명, 2016년 6월 말 1만2106명에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한계다. 중소형카드사를 시작으로 카드업계 전체가 잠식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금감원, 소규모 영세조합 경영진 면담

광주·무안 등 5개 지역 15개 신탁 대상

금융감독원은 지방 도서지역 및 영업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영세조합을 찾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광주(담양), 무안(목포), 해남(진도), 창원(진해), 거제(통영) 등 5개 지역 15개 신탁이 대상이다.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며,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등 경영진 총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 등 상호금융조합은 영세한 자산규모 및 인력 등으로 다른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며 “자산규모가 영세한 신탁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또는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면담은 신탁의 명령휴가제,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정기 및 수시감사 실시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고, 지역경제 둔화에 따라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면담결과 상호금융조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호금융업무에 반영하며, 내년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t@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고용부진... 제도적 보완 필요

한은 ‘우리나라 고용구조 특징과 과제’
청년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등 보완책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 등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실린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장근호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 청년실업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고용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인구(4393만명)의 60.8%(고용률), 경제활동인구(2775만명)의 96.3%가 취

업자(실업률 3.7%)였다. 취업자 가운데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50.2%,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24.4%,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등)는 25.4%였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9%,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취업자 비중은 85.7%에 달하는 등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또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08년 7.1%에서 지난해 9.8%로 크게 상승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자영업자비중은 25.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고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0.1%)에 미치지 못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출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中 유아용품 시장 공략, 인증·품질로 승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출산제한 정책 완화 등에 힘입어 중국 유아용품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품질기준을 강화한 식품·의류·화장품 등의 수출이 유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태동하는 중국 유아용품 시장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은 2조9000억 위안을 기록, 관련 제품 수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분유 등 유아용 식품의 경우 2012년 수입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작년에는 40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 유아용품 시장 성장의 배경에는 출산제한 완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산제한 정책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두 자녀 정책’ 시행 이후 출생인구가 급증하면서 출산제한 정책이 전면 폐지될 경우 출산율 제고는 물론 유아용품 수요와 관련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빠리허우(1980년대 출생자)와 주링허우(1990년대 출생자)의 소비성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아용품 시장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한 이들은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만큼 가격보다는 품질, 소재 등을 우선시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유기농 제품 인증, 유럽 천알리지 인증 등 해외 공인 인증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는 특히 중국 국가식품약품관리국(CFDA)은 최근 유아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제한을 강화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소비에 익숙한 세대들인 만큼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中 소비시장 성장 발맞춰 韓 소비재 수출 확대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 가속도
불균형적 중간재 중심 구조 완화

중국이 세계적인 소비 지출국으로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소비시장의 질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비재 수출을 늘리는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4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한 ‘중국 소비시장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수향 한은 조사국 중국 경제팀 조사역은 “중국의 소



비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되면서 글로벌 2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미·중 간 무역분쟁 심화로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7000억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오는 2022년에는 미국의 4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전체 소비(최종소비지출) 규모는 지난해 43조5000억위안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52.6%에 달한다. 성장에 대한 기여율도 올해 3분기 기준 80%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 소비행태는 ▲개인화 ▲디지털화 ▲고급화 ▲자족화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

면서 소비 활동이 활성화되고 소비행태가 편리성과 독립성으로 강조되는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0% 넘게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주력 소비계층인 중산층도 확대하며 고급 제품 수요가 늘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의 품질 개선 등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약 80%는 자국산 제품에 대해 만족하면서 구매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역은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간재 중심의 불균형적 구조를 소비재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지역별, 세대별로 다양하고 분화되고 있는 중국의 소비시장 특성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